

테마칼럼

문학의 세계

광주3333

디자인 세상

교육의 마당

에너지 절약 시대의 디자인, 자전거



이난경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탈 여건이 안돼 못 탄다는 사람들이 많다. 첫째는 자전거도로가 부실해서이고, 둘째는 사고시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서이며, 셋째는 타고 싶게 만드는 예쁜 자전거가 없어서이다.

어제 유인촌 장관이 자전거로 출근했다는 기사가 멋진 포즈의 사진과 함께 인터넷 뉴스 코너를 도배했다. 문화부 장관이었다면 굳이 나서서 했을 리가 없었겠지만 문화체육부 장관인지라, 정부의 안일한 정책이 불러온 고유가시대의 국민적 고통을 자전거타기 운동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에 안성맞춤인 배역이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나서서 고유가시대의 대책으로 자전거 관련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내용도 엇비슷한 탁상행정식 발상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엔 나쁘진 않다. 자전거 많이 이용하자는데 누가 뭐랄 사람이 있겠는가? 광주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인도 위에 형식적인 자전거도로가 마련되어 있다. 자전거도로만을 이용해 자전거로 이동한다면 5분도 못가서 포기해야 한다. 이유는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인간은 신체의 기능을 확장시킨 다양한 도구들을 디자인하여 사용해 왔다. 손의 기능을 확장시킨 것이 손가락, 젓가락, 삽, 굴삭기 등이라면 다리의 기능인 이동성을 확장시킨 것이 바로 자전거, 자동차라 할 수 있다. 자전거는 인간의 두 다리를 이용해 효율적인 이동을 가능케해주는 무공해 운송기이다. 자동차의 대중화 이후로 기름 많이 먹는 대형차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고유가시대가 되고 보니 건강과 에너지 절약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다들 알다시피 근검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있는 선진국들은 이미 자전거가 운송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되어 왔다. 국회의원들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북유럽의 모습은 왜 북유럽이 가장 삶의 질이 높고 잘 사는 곳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탈 여건이 안돼 못 탄다는 사람들이 많다. 첫째는 자전거도로가 부실해서이고, 둘째는 사고시 처리 등 법적 장치가 없어 불안하기 때문이고, 셋째는 타고 싶게 만드는 예쁜 자전거가 별로 없어서라고 한다. 사실 자전거는 1813년 독일의 칼 폰 드라이스 남작이 발명하고, 1818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특허를 얻은 '드라이지네'라는 세계 최초의 자전거가 만들어진 이후 크게 모양이 바뀌지 않았다. 자동차의 개발 이후 인간은 자전거보다는 자동차의 디자인에 더 열을 올렸다. 그러던 것이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문제로 인해 다시 자전거로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이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대만국제자전거디자인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자전거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출품작들

중에는 아이와 얼굴을 마주보며 달릴 수 있는 자전거가 있는가 하면, 과연 자전거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비행기 모양의 자전거도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디자인 요소를 최소화해 접었을 때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한 X자형 스타일 자전거가 많아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자전거 대국이며, 전 세계 자전거 생산의 60%를 담당하는 중국이 올해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중국 국제자전거디자인공모전'의 수상작은 중국 내 자전거 생산기업에서 상용화해 대량 생산할 계획이러니, 앞으로 자전거디자인에 있어서는 중국이 세계를 리드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도시'를 자연순환형 에너지도시로 조성하면서 도시 내 순환가도를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등으로 분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광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인간 중심의 도로 계획과 공공디자인으로 자전거도시를 만들어 간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도시의 이미지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광주여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약발'없는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 보완해야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 대책의 약발이 전혀 먹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담보인정비율(LTV), 취득·등록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유예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취득·등록세를 절반으로 낮춰주는 세제 감면과 양도세 유예기간 2년 연장은 관련 법규나 규칙 개정이 한 달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아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6·11 대책'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도 한계다. 미분양 신고제도 문제다. 이번 대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미분양 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미분양 확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정작 건설사들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이를 기피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미분양 목록을 신고한 건설업체는 단 한 곳에 그치고 있다. 정부 대책이 미분양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해놓고도 아직까지 정확한 미분양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인식으로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미분양 누적이 건설사 연쇄부도와 금융부실로 이어질 경우 자칫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특히 취약한 지방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제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양도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위기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U대회 유치 재도전 여론 수렴 서둘러라

광주시의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U대회)의 유치 재도전 여부가 지역사회의 이슈로 부상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지난 9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의견이 맞서 있는 만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게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크다. 광주는 국제체육대회 첫 유치가 나섰으나 러시아 카잔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패배했다. 지난 6월1일 새벽, U대회 유치의 낭보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허탈감에 눈물을 흘려야 했다. U대회 재도전 여부는 유치 실패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아쉬움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의욕만으로는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없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토론회를 갖는 것도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가 2013년 U대회 유치가 실패했지만 교훈과 성과는 적지 않다. 토론회에서도 평가는 엇갈렸다. U대회 유치 재도전 찬성론자들은 성과를 강조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유치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광주시는 재도전 여부를 떠나 제기된 의견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수렴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다. 시민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U대회 유치가 재도전할 명분을 잃게 된다. 지금까지 광주시의 공식 입장도 시민들의 뜻에 따라 재도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U대회 토론회를 앞으로 2~3 차례 더 개최하는 만큼 여론이 결집되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시간적 여유다. 2015년 U대회 개최지는 내년 5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 총회에서 결정된다. 광주가 다시 유치가 나서더라도 일정이 촉박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여론 수렴절차를 서둘러 재도전 여부를 가급적 빨리 확정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베이징올림픽 개막(8월 8일) 전 번저 특수를 누리는 나라가 있다. 바로 한국과 일본이다. 일부 참가국들은 대회 전 무렵과 대개오염이 심한 베이징 대신 두 나라를 전지훈련장으로 선택했다. 베이징의 여름은 불가마다. 위도가 평양과 비슷(북위 39도)하고 여름이 무더운 대륙성 기후에다, 1천700만 명의 인구와 200만 대가 넘는 자동차가 내뿜는 열기까지 겹쳐 6월 하순부터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0도를 훌쩍 넘는다. 7~8월에는 40도에 육박하는 날도 흔하다. 여기에도 스모그가 포함되어 있는 연무까지 가세해 베이징의 여름은 가히 살인적이다. 몇 삼m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뿌연 안개가 덮인 한낮에 거리에 나서면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이처럼 여름이 고온스러운 베이징에서 훈련한다는 것은 오히려 선수들의 컨디션을 망치는 일이다. 따라서 베이징을 피해 가까운 한국이나 일본을 전지훈련지로 삼았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 제주도

전지훈련



만 별무소독이다. 지면도가 떨어진 데다, 항공편과 숙박시설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빛이진 결과다. 그렇다고 지역 여건을 맞출 순 없다. 오는 2010년에는 광주·전남과 가까운 상하이에서 '경제올림픽'인 세계박람회(엑스포)가 열릴 예정이다. 제주나 경기도가 어떤 방법으로 상하이 엑스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만일 상하이 엑스포 때에 이번처럼 바다 건너 먼발치로 구경을 피해 가까운 한국이나 일본을 전지훈련지로 삼았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 제주도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특별기고

김혁중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물가도 치솟고 교육비 부담도 나날이 늘고 있다. 이미 저성장 계도에 들어선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은 대학에도 곧바로 직결된다. '고용 없는 성장' 탓에 줄어드는 일자리라는 대학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지원 고갈, 교육 개방의 물결은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지방대학의 위기는 아무 말할 수 없다. 통계청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0년을 정점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에는 입학지원이 30% 가까이 감소하게 된다. 광주·전남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학들의 미충원 인원은 2020년 현재보다 5배 이상 늘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학 스스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생존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글로벌 인재 양성 위해 국제대회 필요

다. 많은 대학들이 지역을 벗어나 세계로 눈을 돌려 물과구를 찾고 있다. 외국 유명 대학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학생들을 내보내고 있다. 국제화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 나아가 광주 학생의 경쟁력을 높여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힘만으로는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함께 높아져야 한다. 세계 어느 민족도 나란히 할 정도의 경쟁력이 뒷받침된다면 동반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광주시가 추진한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어렵게도 유치는 실패로 끝났고, 일각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 우리 광주 학생들의 미래와 관계있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를 키우려면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할 이치다. 세계 어느 민족과도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추지 않으면 지구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세계 학생들의 축제 아닌가. 미래의 지도자가 될

정을 겪게 하면 국제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지방 대학들에게도 많은 자극과 기회가 될 것이다. 적어도 170개국의 대학 관계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분명한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다. 지난 수 년 동안 국제교류를 위해 세계의 대학들을 노크하며 자매결연의 폭을 넓혀왔지만 저명한 대학과 인연을 맺는 일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다. 게다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도 소요됐다. 유니버시아드대회라는 명석이 광주에 깔아진다면 세계 저명대학들과 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실패의 아쉬움을 뒤로 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광주시의 재도전 여부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말도 무성하다. 하지만 약 포장지에 먹는 양이 표시돼 있지 않다. 포장지 겉면의 용법 용량 표기에는 '동봉한 설명서를 참조하라'고만 표기돼 있다. 만약 포장지 안에 있는 설명서를 무시코 버릴 경우 용량을 알 길이 없는 것이다. 1정당 함량이 650mg짜리 인도 제풍의 경우 이 설명서 안에는 "12세 이상 소아 및 성

의료 칼럼

안병현



최근 "의사들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의사 수가 늘면서 병·의원 간 경쟁이 치열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살아가는 의사로서 정작 어려운 점은 진료행위 자체에 있지 않고 제도적 미비나 제반여건에 있는 경우가 많다.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때로는 그런 당연한 것도 상반되는 조건과 충돌하기도 한다. 사전에 승인이 이뤄지는 구조가 아니고 이미 진료행위를 시행한 후에 심사평가원을 심사를 거쳐 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에서 심사자의 권한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보건 의료기법에서는 적정

적정함과 최선 사이에서

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어 그 판단이 모호할 때가 많다. 문제는 그 '적정함'의 의미인데 경제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적정하게 하라는 말은 어디까지가 적정한 것인지 여겨 판단할 수 있겠는가. 진료비 심사를 적정하게 하겠다는 말은 오직 효율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일은 의사가 알아서 책임지라는 말이다. 실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원의 판단은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보험금 삭감을 피하기 위해 적정하게 진료하자는 최선도 하지 않은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 행여 신통한 능력을 지녀 병이 있는 부위만 꼭꼭 짚어내어 겉사하고 치료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화순 안병현·백운 이비인후과 원장>

두통약 복용량 표시 겉포장지에 해야 남용 막아

인은 8시간마다 2정씩 먹고, 24시간 동안 6정을 초과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물론 500mg짜리는 용량이 약간 다르다. 이 두가지 용법을 표기하는데 필요한 공간은 그야말로 새끼손가락 하나 크기의 공간이면 된다. 모든 소비자들을 위해 사용법을 포장지 겉면에 써 주는 게 옳지 않을까. 물론 약사의 복약지도가 있지만 제약회사에서는 이 간담하고도 삼척적인 사정을 핑계했으면 한다. ▲유용학·광주시 서구 덕흥동